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영래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최대의 화두로 매니페스토(Manifesto)가 등장하고 있다.

연일 주요 언론들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매니페스토 운동의 전개 과정을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으며, 후보자나 정당들은 매니페스토 작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또한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선거 전후에 걸쳐 매니페스토에 대한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에 분주하다.

실천 가능한 공약들

우리 나라에 매니페스토가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불과 2개월 보름도 되지 않는다. 지난 2월1일 필자를 비롯하여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531스마트(S-MART)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를 결성, 발족한 이후 매니페스토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매니페스토 열풍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

라당 등 주요 정당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추진본부와 매니페스토 협약을 가진 이후 최근 각 지역에서 지역단위의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조직, 재원 나이가 우선순위에 대한 구제적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5·31' 매니페스토 선거 왜야

전국 곳곳에서 후보자들을 위한 매니페스토 아카데미가 열려 선거운동에 바쁜 후보자들도 시간을 쪼개 수강하고 있다.

그러면 왜 정치권이냐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적용될 일명 '참공약 선택하기'로 지칭되고 있는 매니페스토를 주목하는 것인가. 도대체 매니페스토는 무엇인가에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는가. 매니페스토는 선거 시 후보자나 정당에 의하여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선거공약으로 영국에서 1834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매니페스토는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후 정권을 담당하거나 당선되었을 경우, 반드시 입법회 또는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정책 개요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 기간 중에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서약서이다.

이러한 매니페스토가 일반 공약과 다른 점은 선거 공약의 목표치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내세우며, 또한 실현을 위한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선거공약에 기간, 목표, 공정, 재원 나이가 우선순위에 대한 구제적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매니페스토가 일반 공약과 다른 점은 선거 공약의 목표치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내세우며, 또한 실현을 위한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선거공약에 기간, 목표, 공정, 재원 나이가 우선순위에 대한 구제적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를 평가지표로 삼을 것이다. 지난 3월3일 전윤철 감사원장은 앞으로 업무평가 시 매니페스토의 평가지표인 S-MART 지표에 따른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여 공직사회에도 매니페스토 바람이 불 것이다. 벌써 앞으로 있을 농협조합장 선거, 교육감 선거는 물론 대학 총장선거에서도 매니페스토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한국사회에 매니페스토가 미칠 영향을 대단할 것 같다.

정치문화 선진화 계기

우리는 지금까지 선거때만 되면 정색보다는 혈연(血緣), 지연(地緣), 학연(學緣), 금연(金緣)에 의하여 투표표상으로 자질 부족한 대표가 선출된 사례가 많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았다. 이번 지방선거가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선거가 실시된다면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는 감성적 이미지 선거가 아닌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선거의 뜨거운 경연장이 될 것이다.

후보자는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 작성물, 유권자는 후보자가 작성한 매니페스토를 꼼꼼하게 따지는 간단한 투표 행태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매니페스토는 선거문화 변화는 물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대중' '적당하'의 생활의식도 변화시킬 것이다.

(이주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日 동해탐사도발, 불분명한 EEZ가 문제다

우경 일본 자민당 정부의 계산된 행동으로 보이는 동해 EEZ(배타적 경제 수역)해저탐사문제도 은나라가 시끄럽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민간에선 일본 탐사선이 EEZ를 넘어올 경우 격침시키라고까지 흥분하고 있다.

그러나 냉정을 되찾고 사태를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독도근해의 수로탐사계획을 보고한 것은 이 해역이 자기네 EEZ에 속한다고 주장하고있기 때문이다. 발각 뒤집힌 우리나라가 일본의 탐사를 '도발'로 간주하고 강경대응한다고 밝힌 지난 14일, 아베 신조 일본 관

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사를 행하는 수역은 일본 EEZ 구역"이라며 "우리 EEZ에서 이런 조사를 행하는 것은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상 영토로부터 200해리로 설정되는 EEZ는 한·일 간 처럼 그 상호경

계가 중첩될 경우 중간선으로 합의하는 게 관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도가 있기 때문에 EEZ가 일본쪽으로 훨씬 확장될 수 있으며 일본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지난 1999년 맺은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한일 양국은 딜레마에 빠진 이 문제에 대해 독도 동쪽으로 '한일 공동수역'이라는 애매한 공간을 설정해 둔 채 이문제를 결판내지 않고 미뤄왔던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오늘날 같은 사태가 올 것을 예견하고 이 협정의 폐기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독도문제가 국제분쟁화 하는것을 회피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한일 공동수역은 양국의 독도분쟁이 심화되지 않을 땐 문제가 없지만, 이번 처럼 일본이 시비를 걸어오면 우리로서는 무력대응 아니면 국제사회에 하소연하는 길 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다. 정부는 불분명한 한일 간 EEZ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과오를 솔직히 발표하고 이성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론스타 기부금, 검찰수사에 영향줄 순 없다

론스타가 최근 한덕수 부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외환은행 매각으로 얻게 될 양도차익 4조5천억원 중 1천억원을 사회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과세논란이 해결될 때까지 7천250억원을 국내은행에 예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중인 사법당국이나 세무당국의 조사에도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논란이 일때마다 "근거가 없다" "법대로 처리하자"며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던 종전 입장과는 대조적이다.

론스타의 이같은 자세 변화는 악화된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론스타가 BIS 조작성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각종 의혹의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자칫하면 외환은행 인수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더이상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 따른 자구책인 셈이다. 론스타의 이번 제안은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4조5천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내고도 1천억원의 기부금으로 '반 론스타 정서'를 달래보겠다는 임시방편이 통할지 의문이다. 국내은행에 예치하겠다는 7천250억원 역시 국제청이 추산하고 있는 최대 세금부과 규모인 1조2천억원에 훨씬 못 미친다. 마지못해 기부금 의사를 밝힌 것은 인수과정에 실제 흑마이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설득력을 얻게 됐다. 상황이 악화되자 말을 바꾼데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고올리 만무하다.

론스타 문제로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높아지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법인을 막론하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론스타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번 기부 및 예치금 약속이 검찰 수사나 과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신속하고 공정한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기부금이나 세금 납부를 거론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김용목 장애인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모험이다. 사회의 다양한 장벽에 놓여 무수히 많은 장애인들의 인권이 짓밟혀왔으며, 휠체어리프트조차 목숨을 내놓고 타야 하는 것이 우리 장애인들의 인권현실이다. 특히 비장애인의 중심의 사고와 거부감적 문화 속에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의 여파적 현실은 암담할 뿐이다. 광주에 예외는 아니다.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광주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광주의 한 특수학교와 생활시설에서

찰칵! 동물세상 앵무새 길들이기 앵무새는 원숭이처럼 잘 짜여진 사회생활을 하는 아주 영리한 동물로 통한다. 그 영리함과 조류 특유의 발성기관의 발달로 주변의 다양한 소리들을 기억했다가 흉내 내기도 한다. 이젠 앵무새가 곰들의 몸싸움처럼 지루함을 달래기도 하고, 의사전달 수단인 발성기관을 훈련시키는 일종의 놀이이자 훈련이다. 특히 아프리카산 '회색' 앵무나 뉴기니 앵무 등은 훈련이 잘 되는 앵무새들로, 잘 훈련된 것들은 100개 이상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연예인 같은 앵무새가 되기까지는 그야말로 피나는 훈련사의 내조가 필요하다. 어느 앵무새 훈련사의 이야기를 빌리면 짧은 노래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 날마다 500번 이상 한 달간 똑같은 노래를 반복해 불러 주었고(녹음기로는 안된다고 한다) 하루 24시간을 함께 먹고 자는 동거생활을 같이 한다고 한다. 큰 소리나 심지어 노여운 눈빛이라도 했다간 그때부터 단 한 마디 말도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앵무새 초롱이와 하양이는 전혀 말을 못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따로 훈련을 시킨 것도 아닌데 오머가며 건성으로 가르쳤던 '안녕하세요'란 말을 아침 내내 지겨울 정도로 읊조리고 있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공공시설 폭발물 등 허위신고 끝까지 추적해야 최근 항공기·지하철 등 공공시설에 폭탄을 설치하였다는 허위신고로 상당수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서울발 부산행 비행기 좌석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는 허위신고로 비행기 출발이 1시간여동안 지연된 일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허위신고자를 추적, 검거해 항공안전및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수사했다. 또 대구 지하철 역사에 공중전화 박스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는 신고로 지하철을 1시간여 동안 운행정지 시킨 뒤 허위 신고자

독자마당 무분별한 산림 훼손 감시활동 강화를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자연 훼손이 심각할 정도다. 등산객들의 실화로 산불이 발생하는가 하면 등산객을 가장한 분재용 나무와 난 채취꾼들이 차량을 이용, 먼 곳까지 원종을 가수입된 나무를 분재용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채취해 가기도 한다. 통상 10~30년 정도 오랜 기간 자란 나무를 단지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불법으로 마구 파헤쳐 가면서 산림훼손을 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등산객들이 무심코 버린 담뱃꽂이 온 산림을 태우는 엄청난 화재로 번지는 사례도 수차례 접하지 않았는가. 분재용 나무나 야생란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한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각 지자체 공무원들은 무분별한 분재용 나무 채취의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인근 주민들이나 등산객들도 무분별한 불법 행위를 발견할 때에는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종연·곡성군 석곡면>

無等鼓 비운의 스타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나라를 위해 천재성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월드컵 무대에 서보지 못한 위대한 선수들 명부에 오를 만한 천재가 또 한 명 있는 데 그가 조지 웨아(George Weah)다. FIFA 세계 최우수 선수, 아프리카 최우수 선수, 유럽 최우수 선수상을 동시에 수상한 아직까지 유일한 선수가. 그가 아프리카에서 작고 가장 못사는 나라, 내전에 시달리는 조국 라이베리아를 위해 94년부터 감독직 선수로 월드컵에 도전했고, 마지막으로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예선에 사재를 털어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뛰었으나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비운의 스타, '라이언 킹' 이등공(27)의 월드컵행이 또다시 좌절됐다. 그러나 월드컵을 뛰지 않아도 이처럼 최고에 오른 스타는 많다. 또 이등공에게 주장안정을 차고 포효할 수 있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라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 /기현호 체육·여론대처부장 khh@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略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鎭 편집국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시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